

외교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

- 3 <권두논문> 영토분쟁의 과학적 이해와 이성적 대응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8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22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 33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출범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현재의 동북아에서 도전 요인도 만만찮다. 근간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動因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으로, 한국은 이 두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문제의 경우 미, 중, 일 등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열의나 압박함은 느껴 지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조율에 매달리는 등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조만간 동 구상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중관계 속에서 적절한 스탠스 취하기, 북핵문제 해결 진전, 한일관계 개선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렇 때일수록 정부는 전략적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북핵 문제와 한국 내 다양한 정치 사회변화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일대박론이 통일편익을 강조하면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벗어나 정치, 사회, 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둘째, 통일 한국의 국가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해야 하며, 셋째,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가다듬어 흡수통일 유도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넷째, 통일의 상대인 북한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북 정책을 향한 고민이 통일론에 흡수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바,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 협력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대북 정책 자체를 고민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 정책이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한 유형인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다보스포럼처럼 널리 알려진 국제포럼을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국이 직접 이러한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도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포럼의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현재 국내의 국제포럼들 가운데,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포럼으로는 '제주포럼'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포럼외교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갖고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포럼에 대한 트랙1.5 형식의 강화, 대통령의 참석 관례화 등 다양한 전략적 포석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포럼의 육성은 증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권두논문〉

영토분쟁의 과학적 이해와 이성적 대응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영유권 분쟁과 국력의 함수

국력의 변화에 따른 외교적 위상의 불일치는 국제관계에서 군사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국제관계에서 국력 또는 국가의 이익을 절대적 개념(absolute power)에서가 아니라 상대적 개념(relative power)에서 인식하는 현실주의자의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력이라는 자원은 유한한 반면, 이를 경쟁적으로 축적해야 하는 국제관계의 본질과 국가가 상호관계를 지속하는 과정 자체는 상대방의 행위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변화시켜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다 우월한 지위가 중요한 변수이다. 외교적 위상도 한 국가가 가지는 국력의 일부이며 이와 동시에 국력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반영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력이 그 자체가 목적이며 수단이라는 특성은 국제관계의 외교력에서 가장 단적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 그리고 군사적 경쟁관계와 같은 복잡한 역학관계를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력 특히 외교력의 상호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2000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국제관계를 논의할 때 상투적으로 “동아시아의 약소국” 그리고 “주변 4강 사이에서”와 같은 수식어를 반복하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논의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질서를 주도하는 양극체제의 핵심세력이었고, 특히 미국은 우리의 후견 국가임을 자타가 공인했다. 중국은 첨단 군사력을 포함하여 국가 규모 면에서 그리고 일본은 경제력이라는 기준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주변국이었다. 동아시아의 기존질서로 인정되어 오던 4강 체제가 변화했다고 생각된 것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의 일본 추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의 변화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핵심 변수로 부상한 것은 바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경쟁과 이에 따른 분쟁의 현재화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전은 강도와 빈도에 있어서 최근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2013년 초 출범한 아베 정권의 對한국의교관계는 영토문제가 역사문제와 결합된 민족주의의 대결 양상을 띠면서 한일관계는 악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일본의 역사인식 도발로 인해 한중관계는 상대적으로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서해에서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설정 그리고 이와 연계된 이어도 문제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 한·일, 한·중, 그리고 중·일 사이에 나타난 각국의 입장 충돌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언제라도 현재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새로운 위상과 영유권 분쟁

독도, 이어도,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설정과 같은 국가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해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향후 갈등의 격화가 예상된다. 전제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일 간 센카쿠 문제 그리고 러·일 간 쿠릴열도 문제에 있어서 실효적 지배 근거 및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국에 대해 영유권을 획득하려고 대항하는 도전국의 관계라는 점에서, 중·일 간의 문제에는 일본을 지지해야하고 러·일 간의 문제에는 러시아를 지지해야 하는 미묘한 상황이다. 한국은 독도문제에 있어서나 이어도 문제에 있어서, 현시점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상국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도전국의 다양한 논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빠져있음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총리 직속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독도영유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중국도 서해안의 EEZ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중간선 원칙을 무시하고, 해안선 길이의 비례 또는 자연지형의 연장선과 같은 불합리한 근거를 내세워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과 관련된 독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중 간의 해양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국에 반하여 한국을 지지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국제연합국사령관에게 귀속되며 이는 사실상 미군사령관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관련되는 영유권 분쟁은 당사국가 이외에 미국이 개입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응과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

영토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하는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와 쉽게 결합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구의 기준으로 영토주권의 개념이 확립된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민족국가의 등장에 따라 형성되고, 자연국경개념에 기초하여 동일한 민족구성원이 거주하는 영토에 대한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성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서 영토와 민족의 결합은 유럽에 비해서 훨씬 단선적이며 확고한 내부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왔다.

민족과 결합된 영유권 문제는 민족감정(national sentiment), 그리고 정치이념으로서 민족주의(nationalism)와 관련되어 있다. 민족감정은 자신이 소속한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이익을 수호하고, 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번영을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족주의는 민족감정에서 생성된 열망을 구체화시키려는 이념이나 운동을 의미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구체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익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대응은 민족감정과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일본의 자극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면서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에 반해서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 이어도 문제와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냉정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한편, 중국은 민족주의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관영언론에 나타난 이어도에 대한 보도행태는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공세적 내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은 영토주권에 수반하는 국익은 물론 외교적 위신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자극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라는 점에서 독도와 달리 영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미 2003년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실효적으로 지배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각각 현상을 변경하려고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의 실효적 지배라는 현상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도전국인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동아시아에서 영토분쟁은 상당히 민족주의적 경향이 자리 잡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관영언론의 보도 행태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이며, 시민단체의 활동도 정부와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2008년까지 지속되는 중국언론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보도행태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도 중국 정부의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분쟁에서 다행인 것은 한국의 언론과 한국의 여론이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존하는 보도행태와 반응양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응은 법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이어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국제법적 대비, 다른 영토분쟁과 관련한 국제법 판례분석,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근원과 권원에 대한 증거 수집과 분석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어도와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한국해경에 대한 중국어선의 도발에 대해서도 한국의 여론은 비교적 차분한 대응을 하는 편이다. 중국이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 측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찌엔싱의 이어도 관련 NGO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도 한국 여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여론의 관심에 밀려나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 반대로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 한국은 격렬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영토 및 역사문제를 관련해서 제기하는 발언은 거의 예외 없이 한국의 언론과 여론에 망언으로 인식되어왔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다양한 주장을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발언이 결합되면서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왔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여론은 물론이고 때로는 정부도 상당히 격양된 형태로 나타났다. 한일관계에 대한 경험적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한일관계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분쟁의 강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분쟁의 강도보다 분석의 전체기간에 걸쳐서 약 1.5배 더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망언은 일회성의 성명이나 발언으로 분쟁의 강도가 낮은 반면, 이에 자극받은 한국의 대응은 동시 다발적이며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사소환과 시위와 같

은 강도가 높은 갈등행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빈도와 강도 등 모든 면에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진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유력인사가 망언을 하게 되면, 정부 내에서도 외교부와 주일대사의 유감표명으로 이어지고 국회의원들의 성명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일 시위가 일정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반응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망언에 비해서 지속적인 비판과 비난을 제기한다. 역사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과거의 행적에 대한 반성보다는 무리한 정당화·자기합리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 저자 약력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국제정치학회이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목 차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1년 평가
2. 동북아 정세 현황 및 분석
 - 가. 아태 재균형 정책과 신형대국관계
 - 나. 북한 정세
3. 박근혜 정부의 대응
 - 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 나. 핵심 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1년 평가

- 출범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임.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가 스스로 매긴 국정과제 점수에 의하면 안보와 외교 분야는 합격점이지만, 경제 분야는 낙제
 - 140개 국정과제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국무조정실이 평가해보니 전체 성적은 보통 수준으로, 우수 등급은 29개, 보통은 84개, 미흡이 27개-국방과 외교 분야 과제 가운데 40%가 우수 등급으로 집권 1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외교안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의 주요 축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약칭으로, 동평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대체로 방향성과 목표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
 -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2월 25일)에 즈음해 실시된 지상파TV 3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호의적 평가는 상황에 의한 상대적 ‘반사이익’의 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는 상당 부분 정상외교 등 ‘이미지 외교’의 효과임.
 - 미, 중, 러 성공적 정상회담 개최, 동평구와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원론적 지지 확보는 긍정적임.
 - 집권 1년 차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주요 외교안보 개념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면 집권 2년 차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시점
 - 아직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나 로드맵이 정부 차원에서 제시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한계임.

- 집권 첫해에 주변 4강과 정상회담을 하던 관계를 깨고 일본과는 아직 정상회담이나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임.
- 한일관계 악화가 지속되면 동평구 추진이 어려운 것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순탄치 못할 전망

2. 동북아 정세 현황 및 분석

가. 아태 재균형 정책과 신형대국관계

-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동인(動因)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
 - 중국은 근래 동·남중국해를 핵심국가이익(core interest)으로 추가하고 동 지역에서 공세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 설정을 요구—첫 항모 랴오닝함 시험운항, 스텔스전투기 개발, DF-21D(항모킬러) 미사일, 사이버전 능력 강화 등
 - 이에 대응해 미국은 2011년 하반기 이후 아태 재균형 정책을 적극 추진—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을 중국 봉쇄의 차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아태지역 관여정책으로서 접근하며, 군사·외교·경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multifaceted) 접근으로 규정하고 접근—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multiple budget cycle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방향 수정으로 이해

	미국	중국	한국
군사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으로 분산, 전략적으로 유연,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배치 - 오키나와 해병대 재배치(호주 다윈, 괌) - 싱가포르, 필리핀, 코코스제도 등 순환배치 - 공해전(AirSea Batt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현대화, 해양팽창 - 반접근, 지역거부(A2/AD) - 비대칭전력 강화(잠수함, DF-21D, 최초의 항모 취역) - 제1도련에서 제2도련으로 해양방어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 - 21세기 전략동맹 성숙화,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 확대 - 전작권 전환 이후 대비
외교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ARF, EAS 등 지역다자체제 중시 - 동맹 및 우방과의 협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다자체제 참여 확대 - 아세안에 대해서는 ‘divide and rule’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국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G20 정상회의, 개발원조총회, 핵안보정상회의, GGGI, GCF)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협상 추진 및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3 위주 접근 - 한중일 FTA 협상 개시 - RCEP 협상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바탕으로 전방위적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동인(動因)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

분석의 요지는**미일동맹 vs. 중국****구도가 형성되면서****동북아에서 본격적인****패권 경쟁이 시작되고****있으며, 한반도는****냉전 이후 최대의****안보 상황 변화 속으로****들어가고 있다는 것임**

- 중국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봉쇄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맞지만,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 견지

- 아태지역 중시 선언의 배경은 아태지역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 중국 군사력 강화 및 공세적 성향 증대, 이라크, 아프간에서 미국의 군사작전 마무리 단계 돌입에 따라 아태지역 집중 가능한 여력 발생,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됨.

○ 최근 동·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태세가 강화되면서 아시아 전체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하는 논쟁 전개

- 최근 동북아 정세에 관해 국내 주요 언론들은 대부분 한반도가 냉전 이후 최대의 안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

- 분석의 요지는 미일동맹 vs. 중국 구도가 형성되면서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한반도는 냉전 이후 최대의 안보 상황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임.

- 일부 전문가는 현 상황을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권력정치에 희생양이 되었던 ‘구한말’에 비유하기도 하며, 최근 중국의 대규모 서해상 군사훈련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동참 요구, 일본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주변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격돌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한반도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치밀한 상황진단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 위기의 징후로서 중국의 최근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 방공식별구역 선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나 그것이 향후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도발을 암시하는 갈등상황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유로 오바마 정부는 이번에 물러서면 앞으로 중국의 도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최근 중국의 행동이 A2/AD 전략의 일환이라면 더더욱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

- 미중 간 군사적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제불능 상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우려

-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해양에서의 균형은 상당히 달성했다고 인식(그동안 일본이 누렸던 독점적 우위를 상쇄)하고 있으며, 2008년경부터 일본의 의지를 시험하기 시작해 이제는 공중에서의 균형달성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

- 미·일의 방공구역에 도전하면서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경계(strategic perimeter)를 해양으로 팽창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해
- 실상 모든 ADIZ는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국제법적 근거는 없으나 이번 결정은 외교부보다는 주로 국방부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
- 중국과 주변국들 간에 “전혀 협의 없이(total lack of coordination)”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

○ 최근 중국의 태도 변화

-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것은 중국 외교의 기본 틀이 ‘주동작위(主動作爲·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로 바뀌었다는 의미라는 분석 제기—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이 설계한 대외 전략인 ‘도광양희(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관측이며, 또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홍콩 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가 보도(조선일보 2013.12.10.)
- 對美외교 ‘신형대국관계’와 병행… 주변국 개입수위 높여 이익 관철—對日 강경대응—北 압박이 사례
- “지난해 중국 외교는 적극작위(積極作爲)를 통해 성공의 시작을 연 해였을 뿐 아니라 새것을 창조한 해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해였다”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해 외교성과를 평가—그는 특히 ‘적극작위’, 즉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한다.’를 강조(동아일보 2013.3.10.)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것은 중국외교의 기본 틀이 ‘주동작위(主動作爲·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로 바뀌었다는 의미라는 분석 제기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집단적 자위권	- 일, 자위대 작전 반경 확대 위해 추진 - 미, 중국 견제 위해 지지	-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 “부득이 일본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방공식별구역	- 중 식별구역에 “안정 위협” 반발	- 중 선포에 “유감” 자국 식별구역엔 이어도 제외	- 이어도, 센카쿠 포함 선포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	- 일 영유권 주장 - 미 “센카쿠는 미-일 안보조약 대상”		- 영유권 주장 “핵심 이익”
북핵 6자회담	- 북한의 비핵화 선조치 요구		- 조건없는 재개
미사일방어(MD)	- 중국 견제용 공조 추진	- 저고도 독자 MD 추진	- “중국 포위전략” 강력 반대

북한 정세는 최근

장성택의 실각을

둘러싼 드라마틱한

상황 전개로 보듯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아직

장기적인 체제

안정성에는 불확실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미·중 간 신경전으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G2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안보 차원에서 대응도 복잡해지는 양상
- 동북아 안보구조 재편 과정에서 갈등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앞의 표와 같이 정리함.¹⁾

나. 북한 정세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전체적인 열의나 급박함은 느껴지지 않고, 회담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조율에 매달리는 등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임.
- 북한 정세는 최근 장성택의 실각을 둘러싼 드라마틱한 상황 전개로 보여지듯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아직 장기적인 체제 안정성에는 불확실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관련 대화는 반드시 실질적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 점에도 한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
-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조기 대화를 선호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핵 불용·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 재개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6자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유용한 협상의 틀이기 때문에 그 틀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한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증거와 협상 의지’를 보이려는 것임.
-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작년 11월 22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징후(Indications)가 없는 상태에서 6자회담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며 재차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촉구—“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는 진정성의 신호… 그것이 6자회담의 주요 목적”
- 미국의 입장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은 미국이 현재 이란 문제와 이른바 ‘오바마 케어’ 등 국내 현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한 원인이며, 북한 문제의 결정은 국무부 차원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결정하는 최고위급 결정 사안인데 지금 북한 문제를 끌어안을 만한 충분한 여유의 폭이 없는 것으로 관찰됨(빅터 차 CSIS 연구원).

- 최근 남북 고위급회담 전격 회동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합의로 남

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진전이 있었으나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 북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중시하신다니 그 말을 믿겠다. 통 큰 용단을 해서 받을 테니 앞으로 잘해보자”며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군사훈련을 연제한 기존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
- 대신 북측은 상호 비방·중상 중단과 관련해 우리 측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태도는 견지—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이 ‘중단’ 문제의 핵심이 될 소지를 남김.

3. 박근혜 정부의 대응

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1) 구상의 개요

-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 북한을 포함해 역내의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처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 이 구상의 주된 목표임.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역내 신뢰가 조성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반이 조성되면, 이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중국이 우려하는 미·중 갈등 상황이나 북한발 위협요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구성원 혹은 참여국과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역내 모든 국가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역외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열린 지역협력(inclusive open regional cooperation)’의 성격을 지향함.
 - 출범 초기에는 북한 참여문제로 인해 다자안보대화과 협력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참여에 대한 문호는 열어 둔 상태로 시작함.
 -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이 일천한 동북아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비통제나 군축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문제보다는 비전통적이고 초국가적인 이슈, 즉 연성안보(soft security) 이슈에 대한 협의와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습관과 신뢰를 배양하여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
이 구상의 주된 목표**

한미 정상회담에서**오바마 대통령은****한반도 신뢰프로세스****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원칙적 지지를 표명한****바 있으나, 실현****가능성 및 정책성과****창출 전망에 대해서는****유보적 태도인 것으로****관찰됨**

- 점진적으로 경성안보(hard security) 이슈로의 전이와 확산을 목표로 함.
- 연성안보 이슈들(예: 초국가적 범죄,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재해·재난, 질병, 핵안보, 사이버 테러 등)은 21세기에 들어서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고 다수의 국가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연성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 협력을 통해 역내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불신과 의혹의 벽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협력의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다층적(multi-level)·다원적(multi-dimension) 차원에서 신뢰의 문화, 협력의 습관 그리고 새로운 지역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내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틀과 기초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취지하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연성안보의 예로는 태풍·해일·지진 등 동북아 재해·재난 대응, 환경과 저탄소 에너지자원 역량 강화, 역내 빈곤감축 및 인간개발 수준 제고, 고령화·난민·노동력 이용·탈북자문제 등 포괄적 의미에서의 인구 문제, 문화·학술 및 청소년 교류, 사이버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 주변국들의 반응

-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원칙적 지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 및 정책성과 창출 전망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인 것으로 관찰됨.
 -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시하고 추진함에 따라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양자관계상에서의 제약, 경쟁적 구도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균형자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사실상 “균형정책”을 추구할 가능성과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 있음.
 - 기후변화와 같은 소프트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역내 국가간 협력이 전통적인 하드 이슈의 영역까지 확대·발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역내 여타 국가들의 호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있고 중일관계 역시 대립적 상황이라는 점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
 -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정책(Rebalancing)하에서 동아시아로의 접근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당분간(단·중기적) 미국은 국내 경제와 정치문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외관계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항은 중동문제로 설정되고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비중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안보협력의 틀이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동북아지역에서 현재 상황과 구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에 치중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 아직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추진의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임기 첫해가 지나고 나면 가시적 정책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정책성과가 미흡할 경우 각종 요구사항이 각계로부터 제기될 전망이므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필요
- 현재 동북아의 정세는 긴장 제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나, 역설적으로 과거에 비해 한국의 운신 폭이 더 커진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지속으로 인한 피로증 노정, 연방예산 자동삭감 등 국내외적 여력 저하, 아태 재균형 정책 집중 등의 요인으로 동아시아 다자안보를 추동할 여력이 없는 상태
 -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당면한 국내정치 현안 산적, 센카쿠 문제를 둘러싸고 최악으로 치달는 중일관계에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고, 스스로 대북 레버리지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한계가 있다고 실토
 -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심리적 위축, 아베 정권의 보수우경화 역풍으로 인해 역내 리더십 및 존재감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
 - 이러한 이유로 미, 중, 일 모두 한국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감지-남북관계도 이명박 정부 시절 최저점을 친 이후 이제는 반등할 차례라는 인식이 조성되는 분위기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다면 향후 대외전략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문제는 'bold leadership'을 실행할 전략과 로드맵이 있는지의 여부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병행 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음-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이 취할
전략의 대전제는
한미 전략동맹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병행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

나. 핵심 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

1)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위상 정립

-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병행 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음-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이 취할 전략의 대전제는 한미 전략동맹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병행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국익과 충돌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익이 우선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국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코드 분할이 필요-특정 분야에서는 한·미 협력이 우선하고, 다른 특정 분야에서는 한·중 협력이 우선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어젠다가 서로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중국과는 해난구조(SAR), 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군사적 차원에서도 실현가능한 초보적인 협력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핵심 분야의 협력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한중관계가 원래 협력적 관계가 아니지만 사안과 이슈에 따라 전략적 계산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2) 일본의 집단자위권

-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는 미일동맹 강화 추세와 결부해볼 때 역내 불안정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인 해리 해리스 대장은 작년 11월 22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집단자위권은 유엔이 보장하는 국가 고유권 한”이라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국을 방문 중인 해리스 대장은 이날 용산 미군기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자위권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는 각 국가가 선택할 문제”라고 언급
 - 동시에 그는 한·미·일 해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최근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긴장감을 조성함.
- 한국의 스탠스는 일본이 유엔헌장에도 명시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일본이 자국의 안보 국익에 따라 판단할 사안-한국도 한국의 국익에 따라 판단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안보에 당장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정부가 미·일 양국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만 주게 되므로 우리도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급적 low-key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명한 전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국익과 충돌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익이 우선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국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3) MD 문제

- 미국은 한국이 MD에 공식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이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임.
 - 우리 정부는 북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짧아 요격이 쉽지 않은 한반도 환경,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미 MD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 구축을 추진
 - 미국은 한국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으며, 탐지거리가 1,800km 이상인 지상배치 X밴드 레이더를 백령도에 배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음.
-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은 미국 MD에 공식 참여하기보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저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인 KAMD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
 - 미국은 한미 간에 통합 대미사일역량(Integrated Counter-missile Capability)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이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든 미국 MD와 연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한국의 MD 참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의도가 없는 한 중국이 한국의 KAMD에 관해 우려할 바는 없다는 점의 설득이 필요함.
 - KAMD는 고도나 사거리가 지극히 제한적인 체제이며, 미국 MD 참여는 한국 국방비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옵션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KAMD 구축 입장을 견지하되 미국 MD에 연동 가능하도록(즉, 유사시 미국 시스템에 'plug-and-play'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것이 중국에 대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안—최악의 경우,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적재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을 중국이 방치하거나, 혹은 중국이 북한을 의식해 한국을 압박할 경우 한국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MD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우리의 입장에서는 KAMD 구축 입장을 견지하되 미국 MD에 연동 가능하도록(즉, 유사시 미국 시스템에 'plug-and-play'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 미국 주요 언론들은 최근 들어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한·일 갈등이 미 외교전략에 큰 걸림돌이라는 논조를 유지
 - 과거사 문제를 놓고 냉각된 한·일 관계가 미국의 아시아 외교·안보 정책에 새로운 두통거리로 부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11월

한일관계가 나빠지고**최근 한중관계가****우호적이라고 해서****한국이 중국과****안보문제에 있어서****전략적 이익의****우선순위를 공유할****가능성은 적으므로****일본의 전략적 가치를****냉정하게 판단할****필요가 있음**

24일)–NYT는 “최근 최악 상황에 빠진 한·일 갈등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전략인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함.

– NYT는 한·일 관계 갈등이 격화된 배경을 두 가지로 분석–먼저 미국이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 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비 확장을 지지함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에 민감한 한국을 자극했다는 것임.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양국 새 지도자들의 개인사도 한·일 관계 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NYT는 아베 총리는 오랫동안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본사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해온 우파로, 총리가 되기 전부터 전범으로 체포된 외조부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깊은 욕망을 갖고 있었다고 분석함.

–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제강점기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군부 통치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일본과 유대를 가졌던 아버지와 거리를 두라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³⁾

○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한국정부가 일본을 계속 무시하면서 최근에는 한국이 너무 한다는 인식이 조성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비이성적이고 감정적 대응이 한일관계를 망치고 있으며, 한국이 한미일 전략협력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조성되는 추세임.

○ 한일관계가 현재 나쁘다고 해도 안보문제에 관한 한 한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최근 한중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해서 한국이 중국과 안보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이익의 우선순위를 공유할 가능성은 적으므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일본의 유엔 후방사를 통해 한반도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현 상황은 아베의 야스쿠니 전격 방문과 일본 고위관료들의 퇴행적 역사인식 발언들이 뒤를 이은 탓에 일본이 수세인 형국임.

– 우리가 ‘upper-hand’를 갖고 있을 때 대일 선제적 관계개선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오바마가 4월 아시아를 방문하기 전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판단됨.

– 일본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최소한 만나서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최소한 일본과 대화는 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임.

- 한국도 감정적이거나 비전략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태 재균형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미국에게 일본이 더 중요한가, 한국이 더 중요한가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음.
 -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은 전반적인 아시아 전략 수행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한쪽 편을 더 중요시하거나, 편을 들기는 어려운 상황임.
 - 미국 측에서 한국과 일본을 지칭하는 표현들—예를 들면 linchpin, cornerstone 등—에 집착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일본에서 나오는 과거사 관련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해 하나 “일본에서 표출되는 발언들이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발언이 아님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이행에도 큰 장애 조성의 문제가 있음.
- 3월 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 자리에 출석한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 강화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특히 “분명한 사실은 한-미-일 3자 간의 전략적 협력이 동북아에서 안보 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본질적인 사안에 해당된다”며, “누구도 역사 문제의 부담으로 인해 우리가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일본에는 역사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고, 한국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메시지
 - 러셀과 함께 상원 청문회에 나선 데이비드 헬비(David F. Helvey)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역시 3자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그는 “3자 안보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역제의 핵심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 나라가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협력과 대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틀로써 3자국방회담(DTT)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은 전반적인
아시아 전략 수행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한쪽 편을
더 중요시하거나,
편을 들기는 어려운
상황임*

5) 대북관계의 걸림돌 정리

- 대표적인 사안은 ‘5.24’조치의 발전적 해체
 - 남북러 경제협력 가시화 단계에 들어가면 결국 5.24 조치의 해제가 관건이 될 전망
 - 시간을 끌수록 이는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할 통일외교의 재정립 필요성이 있음.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북한지역을
관리하기에 합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통일외교가 담당해야
할 부분**

-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나가겠다.”
- 통일의 ‘효과’만 말할 뿐 ‘어떻게’ 통일을 이룰지는 언급이 없음.—국내 보수언론도 마찬가지임.
- 통일 가시화 단계, 혹은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사회가 개입할 경우, 실제 진행되는 것은 국제역학,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개입 여부가 결정—한국정부에 대하여 실질적 권한이 어느 정도로 위임 또는 이양될 것 인지의 문제(달리 말하면 한국정부의 북한지역 통치에 대한 실질적 참여도)는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통치 및 행정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밀접히 연관됨.
-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북한지역을 관리하기에 합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통일외교가 담당해야 할 부분—한국이 북한지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한국의 북한지역 접수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됨.
-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단계적 통일, 무력의 행사가 아닌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지향—북한주민의 ‘마음을 사서’ 급변사태 혹은 통일 가시화 단계에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최선임.
- 110만 무장병력의 항배는 또 다른 변수—흡수통일 시도 시 이들이 거부하고 총부리를 한국을 겨냥할 경우 통일은 심각한 장애에 봉착할 것임.

6) ‘전략’ 마인드와 태세 구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2.0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있음.
 - 집권 2년차인 금년에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확실히 제시되고 이를 추동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함.
 - 정부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나 실제로 그러할지는 의문임.
- ‘전략문화’의 부재
 -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 제도 및 문화로 발전해서 정착해야 지속 가능
- 시스템과 인적 구성의 문제
 -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의 NSC 사무처 부활—전략가와 실무자의 균배, 현안 대응과 중장기 전략기획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보다 인원과 조직, 기능이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 기존 안보실의 활동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
- 전문가집단에 대한 outreach를 전담할 부서 필요-EX) QDR 프로세스 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 워크숍과 세미나 등 개최

주석

- 1) 『한겨레』, 2013.11.26.
- 2) “A Growing Chill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reates Problems for the U.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3, 2013; “최악 상황에 빠진 韓·日갈등…美 외교전략에 큰 걸림돌,” 『조선일보』, 2011.11.26.

❖ 저자 약력

■ 이상현

現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및 안보전략연구실장.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음.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구상을 담당함. 한국국제관계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패널(NSP) 연구위원, 매일경제신문 객원 논설위원, 통일부, 육군,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함. 국제정치와 안보, 군사전략, 한미관계, 북한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최근 논저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2013),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미국의 외교·군사전략”(2013),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구상을 위한 시론”(2013),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2012, 공저), 『한미관계론』(2012, 공저),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지도』(2011, 공저), 『변환시대 국가전략: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2011) 등이 있음.

목 차

1. 통일대박론의 의의
2. 통일대박론에 관한 우려 사항
 - 가. 통일대박론의 경제편익론 편향의 문제점
 - 나. 통일대박론의 희망적 사고 경향
 - 다. 통일방안의 정비 필요성과 통일대박론
3. 통일 시나리오와 북한 급변사태 후 통일의 문제점
4. 통일 전략의 방향
 - 가. 통일편익론의 국제정치적 재구성
 - 나. 통일 전략과 통일 외교
 - 다.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정합성 증진 노력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1. 통일대박론의 의의

-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 대박론 및 통일기반 조성의 국정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언론들이 통일에 관한 특집 논의를 제시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가 강화됨.
 - 장성택 사건 이후 북한 정치 불안정 및 향후 급변사태 발발에 대한 예측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핵안보정상화회의를 계기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역시 한국의 통일지향성을 공개적으로 강화함.
- 이러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통일의 당위성 및 통일의 편익에 대한 논의들이 한국 사회에서 약화되고, 젊은 세대 통일 인식이 약화되어 통일 관심 환기의 장점을 가짐. 1997년과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취업난 및 경제성장 부진 등의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위한 적극적 비용지출 의지가 약화된 것이 사실임.
 - 통일에 대한 민족주의적 당위성 논의를 확장하여 현재 한국의 경제 문제 등 새로운 문제와 접합한 편익론은 통일 지향 노력을 배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급격한 통일보다 통일 기반 확보로 목표를 현실화함으로써 단계적 통일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음.
- 통일대박론은 통일편익을 강조하여 통일을 막연한 당위적 사업이 아닌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 및 선진국 진입이라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음.
 - 통일편익은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임.

-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2050년 경제력 순위를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통일한국, 영국, 터키,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순서로 전망함.
 - 세계 경제력 평가에서 통일한국의 국력이 일본, 프랑스, 독일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것.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및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함.¹⁾
- 2050년 통일한국의 인구는 7,350만 명으로 세계 26위가 될 것이며, 명목 GDP는 6조 56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임.
- 생산가능인구도 전체 인구의 58%로 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GDP도 8만 6,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이 한국 내수의 50%를 담당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10년 현재 GDP 대비 2.7%인 국방비 지출은 2013년부터 매년 0.1%씩 줄어들어 2027년부터는 독일 수준인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통일한국의 국방비 절감효과는 1조 8,862억 달러의 누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됨.²⁾
- 독일통일 사례를 보면 통일 초기에 동독 경제가 고도성장하여 동서독 간 소득수준 수렴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
- 동독의 1인당 소득이 서독의 60%를 넘은 후부터는 동독의 성장 속도 및 동서독 간 소득수렴 속도가 크게 느려짐.
 - 독일통일 사례는 소득수준 격차가 큰 두 지역이 경제적으로 통합할 경우 저소득 지역이 초기에는 고도성장, 이후 시일이 흐름에 따라 점차 성장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통일 이후 북한경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임.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 못지않은 고도성장이 기대되고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통일비용 지원 덕분에 초·중기 상당 기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통일 초기 5년간 북한지역은 연평균 20% 이상, 다음 6년은 연평균 10~20% 수준의 초고속 성장, 그 후에는 연평균 10% 미만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통일이 실현될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성장이 기대되지만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남한 대비 북한의 1인당 GDP 비율은 통일시점인 2030년에 지금과 비슷한 5% 근방에서 출발하여 10년 후에는 24%, 20년 후에는 3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

**통일대박론은
통일편익을 강조하여
통일을 막연한 당위적
사업이 아닌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회복 및 선진국
진입이라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

**통일편익론이
한국만의 국가이익을
위한 통일 계기론으로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북한지역의 초고속 성장 덕분에 남북 간 소득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지만, 통일시점에서 남북 간 소득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0년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남북 간에는 큰 격차가 남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임.
- 북한지역 GDP 중에는 남한 자본 소유자가 거두는 이익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한주민 대비 북한주민 1인당 GNP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추측됨.³⁾

2. 통일대박론에 관한 우려 사항

가. 통일대박론의 경제편익론 편향의 문제점

- 통일편익론이 한국만의 국가이익을 위한 통일 계기론으로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통일편익의 주된 청자가 한국민들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함. 통일한국이 강한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논의가 주종을 이루는 한편, 통일한국의 외교적 지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강한 통일한국 출현에 대해 우려를 할 소지가 있음.
-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통일한국이 미중 간의 지역 리더십 경쟁에서 어떠한 외교전략을 추진할 것인지, 지역의 평화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 북한의 정권과 주민도 통일편익론의 향방에 민감한 관심을 가질 것임. 한국 통일론의 철학적 기초가 북한에게 전파된다는 생각하에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 북한 정권의 정상화를 환영하여 개혁, 개방을 지원한다는 정치적 방향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음.
- 통일론의 확산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높는데, 북한의 도발 자제 및 협상 노력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소극적 태도 및 개혁, 개방 거부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음. 이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나. 통일대박론의 희망적 사고 경향

- 통일이 막대한 편익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통일이 바람직한 것이며 따라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가 도출된 이후, 이를 조속히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이 설정될 소지가 있음.
-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대북 전략, 통일 전략, 통일 방안 등의 논의와 통일 후 편익론이 연결되지 않아 통일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됨.

- 신뢰프로세스가 구체적인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략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함.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대북 전략과 통일기반 확보 노력 간의 논리적 연결점이 불명확함.
- 통일대박론이 북한의 급변사태 후 통일론에 대한 전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희망적 사고의 이상주의적 경향을 보일 수 있음.
 - 장성택 처형 후 북한 내부 불안정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급변사태 대비론이 등장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 통일론이 강조되면 급변사태 대비보다 급변사태 유도로 보일 소지가 다분함.
 - 급변사태 유도에 의한 통일이 가능할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가능함.

다. 통일방안의 정비 필요성과 통일대박론

- 현 정부는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북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국제정세의 변화 반영, 통일편익론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정비된 통일방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1980년대 말 이후 다양한 통일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들은 대개 남북 교류협력에 기반한 점진적 통일론들이고, 이들이 공식 정부 견해임.
 - 현 정부의 통일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론이 대두하는 것은 통일 과정에 대한 비전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음.
 -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 통일론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더 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탈냉전기 북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고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교류, 협력을 상정했지만, 관여(engagement)정책, 특히 구조적 관여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안될 당시 남북 간의 국력격차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외교상황도 지금과는 크게 달랐음.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국가차원의 행위자만 주로 고려함.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생각해 볼 때, 거버넌스적인 접근이 필요함.
 - 한국사회변화에 대한 고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편익론과
연결성을 고려한
정비된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우선 통일 시나리오를
현재 상황에서
재구성하여 통일 전략
및 통일 방안, 대북
전략과 연결시켜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

탈민족적, 세계적 경향 등이 강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함.

- 국제정치에 대한 고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1980년대 말 국제정치는 여전히 냉전적 상황에 의해 규정되고 있었던 반면, 향후 통일환경은 미국 패권의 약화, 중국의 부상, 동북아 세력구도의 급격한 변화, 이와 더불어 세계화와 민주화, 정보화의 경향 등으로 거버넌스적, 네트워크적 국제정치 성격의 강화, 초국경적 문제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게 될 것임.

3. 통일 시나리오와 북한 급변사태 후 통일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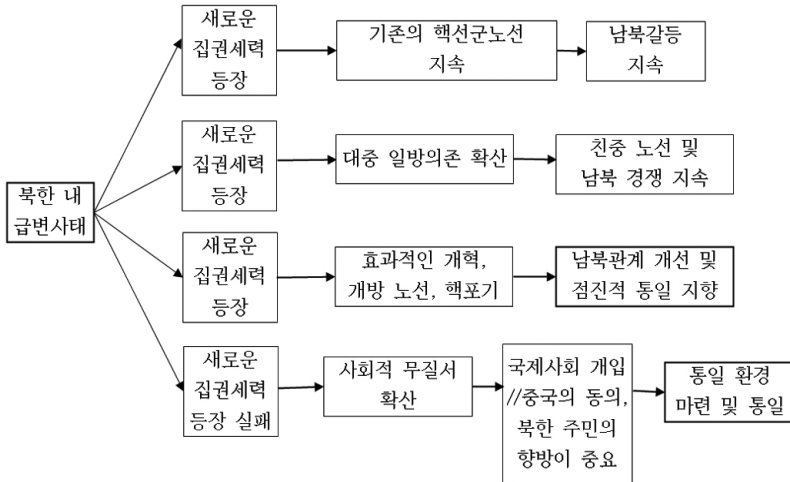
- 통일대박론은 우선 구체적인 통일 시나리오를 현재의 상황에서 재구성하여 통일 전략 및 통일 방안, 대북 전략과 연결시켜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통일 전략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경 분석, 전략 목적 설정, 구체적 실행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통일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가능한 로드맵과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음.

고려요소들	흡수통일유도론	관여, 타협에 의한 통일	연성, 네트워크 통합
가능성: 국제적, 남북 간, 국내적 차원에서 가능한 정책 수단이 있는가?	북한의 급변사태 발발가능성, 중국의 대북 정책에 따른 실현 가능성	북한의 피관여 거부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 북한 내 관여찬성론자, 시장세력의 형성가능성 고려 필요	통일 개념에 대한 비판, 한국 내 여론의 문제,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지역통합의 가능성
정당성: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목적은 정당할 수 있으나, 수단은 강압적	목적과 수단 모두 타당	수단은 타당하나 목적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
이익; 통일과정, 통일 이후 통합에서 이익 정도	통일 이후 막대한 통합 비용,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차별가능성	남북간 동질성 회복, 국력격차 감소, 이후의 통일로 이익 증가	평화적 통합 상태에 의한 이익, 그러나 단일근대국가 형성이 안 된 손해의 문제

- 북한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지배연합 내부의 균열 양상, 경제적 어려

움의 가중, 지도자의 경험 부족 등을 들어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이 도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생길 수 있음.

-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급변사태가 통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국이 급변사태에 대비하며 통일을 지향하되, 급변사태 자체를 유도/지향하지 않는다는 전략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급변사태 유도 노력은 1. 중국의 강한 반발, 2.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우려 및 불신감 증폭, 3. 이로 인한 지역 불안정을 염려하는 미국 및 일본의 의구심 증폭 등의 외교적 손실이 있을 수 있음.
 - 더욱이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 등 주변국의 지지가 없을 경우 북한이 더욱 중국에 편향되거나 한국에 반대하는 세력의 북한 집권의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음.
 - 급변사태로 인한 급격한 통일 시 통일 비용 상승, 북한 지역 정상화를 위한 노력 난관 등의 문제로 통일 이후 통합 과정을 위한 국제적 연대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급변사태 대비를 위한 사전 정지(整地) 외교적 노력도 매우 중요함.
 - 통일 한반도의 외교 지향에 대한 주변국의 합의를 도모해 놓을 경우, 급변 사태 시 국제연합에서의 한국의 입지 확보, 이후 북한 내 안보불안 시 한국의 개입 정당성 확보 등의 이점이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급변사태 이후 통일로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북한 내 세력이 집권할 수도 있음. 이 경우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독려할 중국, 러시아 등 외교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

**통일편익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국가전략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 급변사태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이 새로운 세력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며 점진적 통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로드맵도 미리 제시해 놓을 필요가 있음.
- 급변사태 이후 북한 안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일 편익에 대한 위의 계산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
 - 한 연구는 북한 안정화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 비용과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음.⁴⁾ 특히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한 한국군의 규모가 막대함을 들어 대비 필요성을 강조함.
- 급변사태는 물론 점진적 사태 전개에 의한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 내 군부세력의 우발적 도발 행동의 가능성, 안정화 과정에서의 사태 대처를 위해 한미 간 군사협력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미중과의 협력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해 놓을 필요가 있음.

4. 통일 전략의 방향

가. 통일편익론의 국제정치적 재구성

- 통일편익을 계산할 때, 어떠한 통일을 이루는가, 어떠한 통일 과정을 거치는가가 매우 중요함.
 - 통일 과정을 통일 준비과정, 통일 진행과정, 통일 후 통합과정, 통합 후 통일 국가 발전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통일편익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국가전략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한반도 통일이 한국의 강대국화라는 좁은 의미의 국익이 아니라 현재 세력전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고, 주변국들의 개별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국제정치적 편익 논리 개발이 필요함.
 - 현재 통일 편익론은 협의의 한국 국익에 국한된 논의이며, 이는 보다 강대해진 한국의 출현을 국가이익 침해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한국의 통일 노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이를 위해 한국의 통일은 동북아 국제정치 비정상상의 정상화라는 논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동북아 국제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위들의 근대 이행의 불완전성과 이에 근거한 강한 경쟁성에 있다고 보아야 함.

- 분단된 중국과 한국의 통일 노력,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비보통국가인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의 상황들이 얽혀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역외 세력이 이러한 동북아의 비정상상태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합해지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됨.
 - 한국의 통일은 통일된 중국, 보통국가화된 일본과 함께 상호 공존하고 협력하는 동북아 다자협력에 공헌할 수 있다는 논리개발이 필요함.
 - 각 단위의 정상적 공존을 전제로 한 주권평등, 타국의 주권존중, 전쟁 방지, 다자 협력 등의 규범이 확립되는 방향으로 통일론을 전개해야 함.
- 통일된 강한 한반도가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경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규범적 견해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외교전략이 중요한바, 한국의 중견국적 규범 외교, 강대국 간 협력 촉진 외교, 다자주의 지향 외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통일 한반도는 현재 한국의 지역적 중견국 외교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음. 강대국 간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강한 한반도의 완충 역할론을 제시할 필요.
 - 이러한 외교전략을 정초로 하여 향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중 전략 협력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비전을 제시.
 - 그러할 때 통일 한반도가 친미, 반중 세력이 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 통일 이후 한미동맹 약화, 대중 편향될 것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음.

나. 통일 전략과 통일 외교

- 통일 전략을 위해 통일 외교의 목적과 주된 영역을 생각해 보아야 함.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음.
1. 통일의 당위성 및 국제적 공헌도에 대한 논리 개발 및 홍보
 2. 한국의 대북 정책이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일을 전제로 한 국제적 대북 공동 노선 강화
 3. 통일 이후 통일 한반도의 외교노선에 대한 비전 개발 및 홍보
 4.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 통일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사적 억제력 확보
 5. 북한과의 통합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국제적 대북 지원 확보
 6.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 주도의 통일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지지 확보
 7.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북한 지역 정상화 촉진

통일된 강한 한반도가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경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규범적 견해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점진적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과정을 고려할 경우, 대북 전략과 통일 전략, 통일 방안을 일치시키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8. 통일 한반도의 외교 전략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통일 외교 추구 과정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이 통일을 장기적, 점진적으로 도모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중국 간의 국경 안정, 통일 한반도의 군사적, 외교적 증견국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물론 북한의 개발, 발전을 위한 국제적 대북 공조,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한국이 이를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도 필요함.

다.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정합성 증진 노력

- 과거 대북 관여/포용정책을 추진할 경우 통일 담론의 공식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존재했음.
 - 북한의 급변사태 후 통일을 추진할 경우, 대북 관여전략은 북한을 약화시키기보다 강화시키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급변사태 유도론 혹은 기대론은 전략적 대북 정책 추진과 모순 관계에 있음.
 - 점차 통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으며, 향후 대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야 함.
 - 이전 대북 관여정책에서 흡수통일 불용을 흡수통일 대비로 내용을 바꾸고 대북 억제와 교류협력 추진을 해야 할 상황이 도래함.
- 점진적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대북 전략과 통일 전략, 통일 방안을 일치시키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북핵 폐기, 북한 개혁, 개방 유도 등 어려운 대북 정책의 과제를 우회하기위해 통일정책에 몰두하는 것 같은 인상은 경계해야 함.
 - 통일 친화적 대북 정책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의 통일 염원을 강화시키는 것임.
 - 남북 교류 협력이 증가하면서 한국 및 국제상황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통일에 대한 한국의 비전과 준비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의 강화에 오용되지 않도록 교류, 협력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대 정부 간 대규모 경제지원 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대북 협력을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함.

-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 간의 정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정보의 적절한 공유 및 정책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북한은 단기적 안정, 중장기적 불안정성 증가의 전망을 해볼 수 있음.
 -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북핵 보유를 선언하면서 대중 경제 의존도가 심화됨.
 - 동시에 광물자원을 수출하여 대내적 생산성은 증가되지 않은 채 정권 유지 및 분파의 경제적 이익 확대에 몰두하는 지대추구국가화의 경향이 증가됨.⁹⁾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내 분파 간 정치적 불안정성 동향, 경제적 쇠퇴의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대북 정책 자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나, 당분간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 평화공존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 노력, 동시에 개혁, 개방 지향 북한 내 세력 독려 및 지원 등의 순차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북한은 단기적 안정 기간 중 핵보유, 경제발전의 병진전략을 추구할 가능성, 군부세력의 강경한 대외 노선을 예상할 수 있음.
 - 이산가족 상봉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제재 조치 수정방향 제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 수 있는 구조적 관여의 전반적 방향 제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북한은 2월 1차 고위급 회담 이후 한국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어 할 것임. 드레스덴 성명은 본격적 대북 교류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과 무력 시위를 통해 향후 한국과 미국의 본격적 대북 교류 로드맵을 촉구하려 할 것임.
 - 이러한 가운데 통일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북, 외교 노력의 총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장기적
평화공존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 노력,
동시에 개혁, 개방
지향 북한 내 세력
독려 및 지원 등의
순차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주석

- 1)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188(September 21, 2009).
- 2) 통일연구원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중간보고회 자료집(I) (2011.3.31), pp.179-182.
- 3) 조한범 · 김규륜 · 김석진 · 김형기 · 양문수 · 이명진 · 임강택 · 정성철 · 황선재, 『정치, 사회, 경제분야 통일비용, 편익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3) 참조. 이 연구는 점진적 3단계 통일 방법을 상정하고 있으며 통일 시기로 2030년을 설정하고 있음.
- 4) Bruce W. Bennett and Jennifer Li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2(Fall 2011), pp.84-119.
- 5) 박형중 · 임강택 · 조한범 · 황병덕 · 김태환 · 송영훈 · 장용석,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2012) 참조.

❖ 저자 약력

■ 전재성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1997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회의주의로서 고전적 현실주의: E.H. 카아, 한스 모겐스, 라인홀드 니버의 현실주의”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재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이며, 일본 게이오 대학교 방문교수로 재직하였음.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소프트파워와 포럼외교 개념의 검토
 - 가. 지식과 네트워크의 소프트파워
 - 나. 공공외교로서의 포럼외교
 - 다. 포럼의 컨셉: 다중이해관계자 이론
2. 국내외 대표적 국제포럼의 현황
 - 가. 다보스포럼
 - 나. 보아오포럼
 - 다. 국내외 국제포럼
3. 제주포럼의 현황 및 과제
 - 가. 제주포럼의 현황
 - 나. 제주포럼의 과제
4. 제주포럼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 가. 다보스·보아오 포럼의 소프트파워적 함의
 - 나. 국가적 차원의 제주포럼 육성
 - 다.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 관례화
 - 라. 포럼외교의 활성화
 - 마. 트랙1.5 형식의 가미

1. 소프트파워와 포럼외교 개념의 검토

가. 지식과 네트워크의 소프트파워

- 조지프 나이(Joseph S. Nye)에 의하면, 소프트파워(soft power)란 ‘강제나 보상 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소프트파워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능력이고, 국가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기반을 두는 권력이라 할 수 있음.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비물질적 변수’에 대한 강조와 함께,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 자원에서 우러나오는 권력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 조지프 나이는 21세기 세계정치를 3차원 체스게임에 비유함. 맨 위의 체스판에서는 단극적인 군사력 게임이 벌어지고, 중간의 체스판에서는 다극적인 경제력 게임이 벌어짐. 맨 아래의 체스판에서는 테러·국제범죄·기후 변화·전염병 확산 등의 초국가적 이슈들이 전개되는데, 여기서는 단극이나 다극을 넘어 매우 광범위한 권력 분산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복합적인 게임의 양상이 드러남. 국제사회의 성숙과 정보화에 따른 지식과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21세기 세계 정치의 체스판은 3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임 (Nye, 2004).
-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조지프 나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하드파워(hard power)처럼 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완력’ 보다는 소프트파워처럼 비물질적 자원에 의지하여 ‘끌어당기는 매력’이, 노드(node)들을 불러모아 네트워크의 세를 불리는 데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임(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008). 이른바 ‘네트워크 파워’는 네트워크상에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 요충지를 차지하고 ‘통(通)’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권력임. 이는 일종의 스위처(switcher) 또는 조정자(coordi-

지식외교의

**한 유형으로서,
주요 국제 문제들을
어젠다로 설정해
다양한 국제회의,
세미나 등 회의체를
통해서 국제적인
지식연대와 합의를
구축해 나가는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음**

nator)가 네트워크상에서 발휘하는 권력이라 할 수 있음(이상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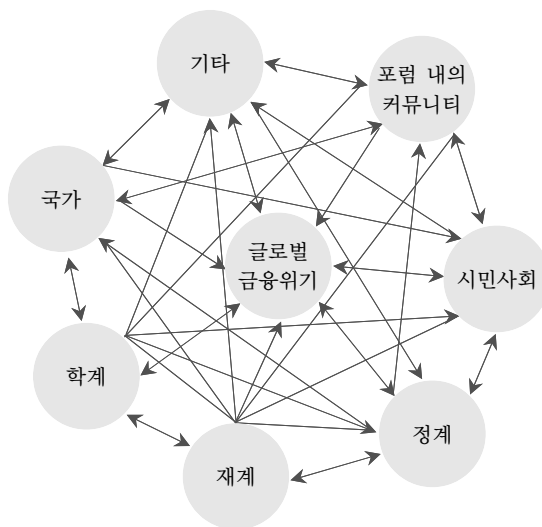
나. 공공외교로서의 포럼외교

-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외교로 재등장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는 문화외교, 지식외교, 미디어외교 등의 형태가 있음. '지식외교(knowledge diplomacy)'는 지식의 전파와 공유를 통해 범지역적·범세계적 지식 공동체,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지식외교의 한 유형으로서, 주요 국제 문제들을 어젠다로 설정해 다양한 국제회의, 세미나 등 회의체를 통해서 국제적인 지식연대와 합의를 구축해 나가는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음.
 - '포럼'의 사전적 의미는 '토론의 장소' 또는 '토론을 위한 모임'임. 토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식'이며, 포럼 참가자들은 특정 주제나 이슈,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지식의 형태로 전달함. '포럼외교'란 곧 회의체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수단 또는 매체(medium)로 사용하는 공공외교의 한 형태를 지칭함.
- 공공외교의 매체로서 국제포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첫째, 포럼은 개방적·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특정 이슈나 어젠다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의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음.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의 차이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외교의 중요한 출발점임.
 - 둘째, 포럼을 주관하고 조직하는 입장에서는 포럼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발신할 수 있음. 어젠다가 국제적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클수록 포럼 조직자의 어젠다 설정력(agenda setting power)은 보다 큰 공공외교적 의미를 갖게 됨.
 - 셋째, 포럼의 회의체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특정 포럼이 지속성을 가질 경우 국가 간 교류를 심화·확대하는 장으로 기능하게 됨. 이는 또 제도화된 정부 또는 민간 사이의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넷째, 포럼을 통해서 참가자들 간 합의적인 지식(consensual knowledge)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합의된 지식의 축적은 궁극적으로 '지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y)'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현안 이슈들을 둘러싼 지식공동체의 존재는 합의를 통한 갈등관리, 위기관리, 문제해결에 유리한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의미를 지님(김태환, 2014).

다. 포럼의 컨셉: 다중이해관계자 이론

-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창설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포럼의 컨셉으로 ‘다중이해관계자 이론(Multistakeholder Theory)’을 제시함.
- 슈밥이 1971년에 다보스포럼의 전신인 ‘유럽 경영 심포지엄(European Management Symposium)’을 기획하면서 기초로 삼은 ‘다중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즉 소비자·종업원·협력업체·정부·시민사회 등의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함. 슈밥이 그의 책 『기계공학적 현대 기업 경영(Moderne Unternehmensführung im Maschinenbau)』에서 처음 소개한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들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임.
- 원래 다중이해관계자 이론의 중심에는 이처럼 기업이 있었음. 그러나 이 이론이 포럼을 설계하는 데에 사용되면서부터는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중심에 이슈(이를테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어가고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도 연결고리가 생기는 등의 변화를 겪음.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슈밥의 목표였음. 오늘날 다보스포럼 내에 존재하는 각종 커뮤니티들뿐만 아니라 정계·재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네트워크를 형성함(문정인·이재영, 2014).

<그림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슈에 따른 네트워크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슈밥의 목표였음**

* 출처: 문정인·이재영(2014), 『다보스 이야기』, p.50

연차총회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은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포럼임.
스위스에 기반을 둔
민간의
독립재단이면서
사실상 국제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 국내외 대표적 국제포럼의 현황

가. 다보스포럼

- 연차총회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포럼임. 다보스포럼은 스위스에 기반을 둔 민간의 독립재단이면서 사실상 국제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다보스포럼의 미션은 글로벌 공동체 건설에 창조적 동력을 제공하고 지구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촉매제가 된다는 것임.
 - 다보스는 스위스 동부의 그라우뷘덴 주에 위치한 스키 휴양지로, 인구가 1만여 명에 불과한 알프스기슭의 외진 마을임. 이러한 다보스에서 슈밥이 1971년에 처음 시도한 '유럽 경영 심포지엄'이 성공을 거두자, 같은 해에 이를 '유럽 경영 포럼(European Management Forum)'으로 이름을 바꾸고 비영리재단으로 정식 등록함.
 - '유럽 경영 포럼'은 초기에는 주로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경영 기법을 따라잡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운영되었지만, 1973년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 붕괴와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1974년에는 경영 외에 경제·사회 이슈들로 논의의 초점을 넓히고 정치 지도자들도 처음으로 초청함. 1976년에는 1,000개의 세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멤버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포럼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짐. 지역별 회의를 여는가 하면, 1979년에는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 Report)'를 발간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식 허브(knowledge hub)'로 자리 잡기 시작함.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유럽 경영 포럼'은 1987년에 '세계경제포럼'으로 개칭하고, 국제적 갈등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추구하는 등 그 비전과 활동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감.
- 매년 1월의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이후에 남미·아프리카·동아시아·인도·유럽·중동에서 개최되는 6개 지역회의에서는 연차총회에서 제기된 테마 가운데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룸. 다보스포럼은 또 매년 9월 중국에서 '뉴 챔피언 연례회의(The Annual Meeting of the New Champions)'라는 일명 '하계 다보스포럼'도 개최하고 있음. 이처럼 지역단위 모임의 활성화와 각종 이벤트 개최로 인해 다보스포럼은 사실상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음. 여기에도 재정 건전성까지 더해져 다보스포럼은 어느 국제기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 2013년도의 경우 다보스포럼의 고정 수입인 회비만도 1억 3,300만 스위스 프랑

(약 1,596억 원)으로 총수입의 71%에 달함.

- 다보스포럼은 100여 개국에서 2,500여 명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매년 1월 마지막 주의 4일 동안(수·목·금·토)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의 장이 됨. 다보스포럼이 초청하는 250명의 정상급 정치 지도자·국제기구 수장과 함께, 세계적 기업 CEO들은 금융위기, 양극화, 일자리창출, 기후변화 등 글로벌·지역·경제·산업 및 비즈니스·미래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함. 다보스포럼은 정치인을 초청할 경우에는 현안 이슈 해결에 영향력을 지닌 현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함. 공식 세션만도 250여 개에 달하는 다보스포럼에서 관심을 모은 주요 의제들은 G8과 G20 등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
- 다보스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의 근교 콜로니(Colony)에 본부를 두고 뉴욕, 베이징, 도쿄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다보스포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재단 이사회는 슈밥을 포함해 정계·재계·학계·국제기구를 대표하는 22명으로 구성됨. 다보스포럼의 내부조직으로는 슈밥 회장을 필두로 하는 상무 이사진 아래 디렉터들이 있고, 이들과 함께 60여 개국의 다양한 출신 배경과 경력을 지닌 스태프 550명이 포럼의 실무를 담당함.
- 다보스포럼이 회원제를 도입한 후 회원들 간에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적 소모임인 커뮤니티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남. 1997년에는 이들 중 몇몇을 엄선해 ‘파트너’ 개념을 도입하자 커뮤니티 활동은 더욱 활발해짐. 오늘날에는 100개의 ‘전략적 파트너’와 320개의 ‘산업 파트너’ 커뮤니티들로 늘어남. 이러한 커뮤니티들이 지식생산과 문제해결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보스포럼은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함.
 - 이들 가운데 핵심 커뮤니티가 ‘글로벌 어젠다 위원회(GAC)’임. GAC에는 각각 15~20명으로 구성된 88개의 소위원회에 모두 1,500여 명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속해 있음. GAC는 매년 11월에 UAE에서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이라 불리는 ‘글로벌 어젠다 정상회의’를 열어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듬해 1월의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내용을 의제가 다듬어짐. 또 다보스포럼 커뮤니티들은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12가지 기준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비롯, 150개의 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함.
- 한편 초청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다보스포럼에 대해 ‘소수의 가진

**공식 세션만도
250여 개에 달하는
다보스포럼에서
관심을 모은
주요 의제들은 G8과
G20 등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

명칭에 ‘아시아’가 들어가는 듯이

보아오포럼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

협력을 주된 의제로

다뤄왔음.

근래 들어 다른 지역과

관련된 현안들까지

논의의 폭을 확장

자들만의 축제’, ‘세계화의 침범’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이러한 비판을 수렴해서 다보스포럼은 2001년부터 NGO나 시민사회의 운동가들도 함께 포럼에 초청하고 있음. 다보스포럼은 2003년 이래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포럼(Open Forum)’을 연차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다보스 한복판의 학교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 2014년 1월 22일~25일에 열린 제44차 다보스포럼의 대주제는 ‘세계의 재편: 사회, 정치, 기업에 대한 영향(The Reshaping of the World: Consequences for Society, Politics and Business)’임. 이는 세계의 5대 리스크(국가간 분쟁 확산, 소득 불균형 확대, 구조적 실업 증가, 기후변화 심화, 사이버 위협 확대)를 인지하고 5대 변화요인(초연결 사회의 도래, 수직적 의사결정의 네트워크화된 수평화, 지구촌 거버넌스의 변화, 아시아의 부상, 지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을 활용함으로써 세계의 재편에 대비하자는 것임. 이러한 ‘세계의 재편’을 위해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포괄적 성장의 성취 △파괴적 혁신의 포용 △사회의 새로운 세대들의 충족 △90억 명의 지속가능한 세계 등 4개 테마를 골간으로 내걸었음(현대경제연구원, 2014).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60개 이상의 세션이 스트리밍 형태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장의 분위기가 전달되는 등 ‘디지털 다보스포럼’도 점차 활성화돼 가고 있음을 보여줌(연합뉴스, 2014년 1월 22일 자).

나. 보아오포럼

- 매년 4월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의 휴양지 보아오(博鳌)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의 정식명칭은 ‘아시아를 위한 보아오포럼(Boao Forum for Asia: BFA)’임. 명칭에 ‘아시아’가 들어가 있듯이 보아오포럼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 협력을 주된 의제로 다뤄왔음. 근래 들어 포럼 참가 대상이 크게 확대돼 아프리카·유럽·남미 등 다른 지역과 관련된 현안들까지 논의의 폭을 확장하면서 보아오포럼은 세계적인 포럼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보아오는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섬(海南島)의 동해안 충하이시(瓊海市)에 속하는 진(鎮: 우리나라의 읍 정도에 해당)으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어업과 농업에 종사한 작은 어촌에 지나지 않았음. 남중국해에 접하는 이곳에서 보아오포럼이 열려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30여 개의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서고, 컨벤션센터와 온천·골프장 등을 갖추으로써 중국 유수의 관광지로 탈바꿈함.
- 1996년 말에 호크(B. Hawke) 전 호주 총리, 라모스(F. V. Ramos) 전 필

리핀 대통령, 호소카와(M. Hosokawa) 전 일본 총리가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창설 아이디어를 냈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로 논의가 중단됨. 그러다가 이들은 1998년 9월에 다시 이를 정식으로 제안함. 1999년 10월 호크 전 총리와 라모스 전 대통령이 중국의 후진타오 당시 부주석을 면담한 후, 중국은 호주와 함께 포럼 창설 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아오를 포럼 장소로 선정하면서 2001년 2월 창립총회를 갖게 됨. 보아오포럼 창설에 대한 구상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추세 속에 EU와 NAFTA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의 가속화에 아시아가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아시아인에 의해 주도되고 아시아인의 시각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전체의 포럼이 부재하다는 각성에서 출발함.

- 보아오포럼 출범 당시 창립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 중국·일본·호주·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 26개국임. 보아오포럼의 제1차 연례총회는 2002년 4월에 개최됐는데, 이후 보아오가 영구 개최지로 결정됨. 보아오가 개최지로 정해진 것은 당시 포럼 설립을 논의하던 당사자들이 주로 이곳에서 모임을 가졌고, 관광 진흥을 위한 하이난성의 이해에도 부합했기 때문임(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09; 외교부 보도자료, 2006년 4월 21일 자).
- 보아오포럼이 다루는 주제는 아시아의 경제통합 촉진과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개발, 에너지·자원 문제, 기후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이슈와 보편적인 현안으로 확장되고 있음. 보아오포럼은 매년 4월의 연례총회 외에도 금융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회의를 세계 각지에서 수시로 개최하거나 후원함. 또 보아오포럼은 매년 아시아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행정효율 △기반시설 △거시경제 △사회발전 수준 △인력자원 및 혁신 등 5개 지표를 지수화해 경쟁력 순위를 발표함.
- 정치인들이 창설을 주도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비영리 민간기구 형태인 보아오포럼은 사무국을 베이징에 두고 있음. 참석 대상과 어젠다가 아시아를 뛰어넘음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된 보아오포럼 이사진에도 골드만 삭스 CEO 출신으로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한 헨리 폴슨(Henry Paulson)과 볼보(Volvo)그룹 회장을 지낸 스웨덴의 라이프 요한손(Leif Johansson) 등 비 아시아인들이 포함됨. 지난해에는 최태원 SK회장의 후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규로 보아오포럼 이사에 선임됨.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현재 보아오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음.
- 참석자가 초기의 1,000여 명에서 점차 늘어 2013년 4월 6일~8일에 열

보아오포럼 창설에 대한 구상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추세 속에 아시아가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아시아인에 의해 주도되고 아시아인의 시각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전체의 포럼이 부재하다는 각성에서 출발함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에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주포럼과
같은 다보스포럼
스타일의 ‘망라형
종합포럼’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는
국제포럼이 있음**

린 제12차 보아오포럼에는 43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함. 물론 중국 측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세계 도처에서 정관계·경제계·학계·언론계 등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등 11개국 정상과 라가르트 IMF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헤지펀드 거물 조지 소로스 등 명사들도 자리를 함께 함(연합뉴스, 2013년 4월 6일 자). 중국의 우수한 재계 대표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는 보아오포럼에 대해 ‘관시(關係) 비즈니스’의 연장이라거나 ‘금권교역(金權交易)의 무대’라는 비판도 있지만 서구 중심의 다보스포럼에 비해 개방적이라는 호평도 있음(정상화, 2013).

- 제13차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Asia's New Future: Identifying New Growth Divers)’를 대주제로 2014년 4월 9일~11일에 열릴 예정임. 이번 제13차 보아오포럼은 31개의 세션과 4개의 라운드테이블, 7개의 대화(Dialogue), 9개의 비공개(closed-door) 세션, 그 밖에 야외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3개의 TV토론(Debate), 오·만찬 세션과 조찬모임, 밤 시간의 보아오살롱(Boao Salon)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됨. 세션의 주제들로는 △인터넷 금융 △자본시장의 문제와 해법 △중양은행의 미래 △상해 자유무역실험지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미래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기후변화 △EU 개혁 어젠다 △중국과 미국: 아태지역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 △러시아-중국 에너지·금융 대화 △일본을 위한 신성장 전략 △APEC과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도시화 △공공외교와 국가이미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임. ‘남중국해: 윈-윈과 협력 모색’ 주제는 비공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임.

다. 국내의 국제포럼

-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에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주포럼과 같은 다보스포럼 스타일의 ‘망라형 종합포럼’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는 국제포럼이 있음. 여기서는 매일경제신문의 세계지식포럼, SBS의 서울디지털포럼, 조선일보의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한국경제신문의 글로벌 인재포럼, 인천광역시가 주도하는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함.

1) 세계지식포럼

-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TV가 두뇌강국, 창조적 지식국가의 ‘비전코리아

아’를 내걸고 2000년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을 창설함.

- 세계지식포럼에는 매년 50여 개국 2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를 포함해 모두 3,0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음. 매년 10월에 세계적인 기업가, 석학,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예측하고 기업경영 전략을 제언함.

세계지식포럼은 2007년 ‘부의 창조와 아시아’를 주제로 내건 이래 ‘협력의 마법 & 아시아시대’(2008년), ‘원아시아 모멘텀, G20리더십 & 창조적 혁신’(2010) 등 아시아의 역할을 강조해옴. 제14회 세계지식포럼은 2013년 10월 15일~17일에 ‘원아시아 대변혁(One Asia Metamorphosis)’을 주제로 총 67개 세션이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진행됨.

2) 서울디지털포럼

- SBS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혁신을 이뤄낼 영감을 공유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디지털포럼(Seoul Digital Forum)’을 2004년 창설함.
- 매년 5월에 T.I.M.E.(Technology, Information, Media and Entertainment) 산업과 주요 글로벌 이슈들을 선도하는 연사들을 초청, 범세계적인 지식 혁명과 산업의 변화 등을 논의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함. 메인세션과, 별도로 세부 주제에 대한 3개 심화세션으로 구성된 제10회 서울디지털포럼이 2013년 5월 2일~3일에 ‘초(超)협력-내일을 위한 솔루션’을 주제로 서울디큐브아트센터에서 개최됨.

3)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는 국가적 어젠다를 발굴하고 활로와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로, 2005년에 처음 열림.
- 동남아 쓰나미 사태에 대해 아시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ALC가 2005년 3월 3일~4일에 열림. 제2회 ALC는 2008년 2월 21일~22일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춰 ‘리더십과 변화’를 주제로 개최됨. 제3회 ALC(2012년 3월 6일~7일)는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제4회 ALC(2013년 3월 26~27일)는 ‘아시아의 새로운 과제: 착한 성장, 똑똑한 복지’를 주제로 진행됨. 2014년 3월 3일~4일 ‘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를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회 ALC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함(조선일보, 2014년 3월 5일 자).

4) 글로벌 인재포럼

- 교육부와 한국경제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세계지식포럼에는
매년 50여 개국
2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를 포함해 모두
3,000여 명이 참석.
세계적인 기업가,
석학,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예측하고
기업경영 전략을
제언함*

제주포럼은 2001년 6월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돼 격년제로 열리다가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약칭 '제주포럼')'으로 개칭, 매년 5월 마지막 주의 3일 동안(수·목·금)에 정례 개최되고 있음

활용을 위해 2006년 '글로벌 인재포럼(Global HR Forum)'을 창설함.

- 글로벌 인재포럼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의 해결을 글로벌 협업을 통한 창조적 인재 개발에서 찾음. 2013년 11월 5일~7일 제8회 글로벌 인재포럼이 '벽을 넘어서'를 주제로 각국 관계장관, 글로벌 기업 CEO 및 HR 총괄 부서장, 세계 우수대학 총장,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림.

5)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은 아시아 및 세계 경제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주도로 2009년 창설됨.
-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재단의 주최로 매년 11월에 열리는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에는 아시아·태평양 10여 개국 300여 명의 학계·재계 인사 등이 참석하고 있음. 23개 세션으로 구성된 제5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이 2013년 11월 1일~2일에 '아시아 공동체: 이슈와 해법'을 주제로 인천 하얏트트리젬시호텔에서 개최된 바 있음.

3. 제주포럼의 현황 및 과제

가. 제주포럼의 현황

- 제주포럼은 2001년 6월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돼 격년제로 열리다가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약칭 '제주포럼')'으로 개칭, 매년 5월 마지막 주의 3일 동안(수·목·금)에 정례 개최되고 있음.
- 제1회 제주평화포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 및 안보협력을 위한 대안 모색과 함께 '세계평화의 섬 제주' 건설을 위한 국내외 지지기반의 확보를 위해 2001년 6월 15일~17일에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림.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을 대주제로 내건 제1회 제주평화포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에 대한 특별논평을 함. 이듬해인 2001년 4월 12일~13일에는 '21세기 세계평화의 재검토와 평화의 확산'을 주제로 한 약식포럼('세미포럼')이 개최됨.
- 2003년 10월 30일~11월 1일에 열린 제2회 제주평화포럼과 2007년 6월 21일~23일에 치러진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함. 2009년 8월 11일~13일에 개최된 제5회 제주평화포럼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함. 2007년 제4회 제주평화

포럼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을 위해, CSCE(유럽안보협력회의)/OSCE(유럽안보협력기구)를 탄생시킨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모델로 하는 ‘제주 프로세스(Jeju Process)’의 추진을 촉구하는 ‘제주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음.

-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 출연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아시아의 다자협력, 세계평화의 섬 구현 등을 위한 연구와 교류·네트워크의 거점 마련 차원에서 2006년 3월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은 2007년 제4회 포럼을 시작으로, 2013년 제8회 포럼까지 그동안 5차례의 제주포럼을 주관해 오고 있음.
- 제주포럼은 2011년 5월 27일~29일에 열린 제6회 포럼부터 격년 개최를 연례 개최로 바꾸면서 포럼의 이름도 ‘제주평화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개칭함. 제주포럼에서 다루게 되는 어젠다 영역을 기존의 평화와 안보 위주에서 경제·환경·문화·여성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종합포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참가 대상 지역도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넓힘.
- 2012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포럼 상설 사무국이 같은 해 12월에 제주포럼의 주관 기관인 제주평화연구원의 산하에 설치됨. 이에 따라 제주포럼의 추진 체계는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의제선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정비됨.
 - 현재 제주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외교부·국토건설부·한국국제교류재단·동북아역사재단 등 20여 개 기관의 후원으로 치러짐. 제주포럼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직접 주제 개발 및 세션 운영에 나서는 콘도미니엄 운영 방식도 정착되고 있음. 제주포럼의 결과는 책자로 발간해 각계에 배포함.
- 2013년 5월 29일~31일에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제주포럼에는 49개국에서 정치·경제 지도자, 전·현직 각료, 학자, 외교관, 언론인 등 3,6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54개 세션으로 진행됨. 세부 주제들은 △외교·안보·국제협력 △경제·경영·개발·IT △환경·문화·여성·제주지역 이슈 등이었음.
- 올해 제9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설계(Designing New Asia)’를 주제로 5월 28일~30일에 열릴 예정임. 제9회 제주포럼에서는 외교

제주포럼에서 다루게 되는 어젠다 영역을 기존의 평화와 안보 위주에서 경제·환경·문화·여성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종합포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참가 대상 지역도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넓힘

안보·경제경영·문화·여성·환경·지역개발 분야에서 모두 60여 개 세션과 세계지도자 세션, 특별세션 등이 기획되고 있음. 아래 <표 1>은 역대 제주포럼의 개요임.

올해 제9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설계

(Designing New

Asia)'를 대주제로

5월 28일~30일에

열릴 예정임.

제9회 제주포럼에서는

외교안보·경제경영·

문화·여성·환경·

지역개발 분야에서

모두 60여 개 세션과

세계지도자 세션,

특별세션 등이

기획되고 있음

<표 1> 역대 제주포럼의 개요

회차 및 개최일	주제 및 참가자	
제8회 포럼 2013.5.29~ 5.31	주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참가자	정홍원 국무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시모무라 하루분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 호세 루이스 구테레스 동티모르 외교장관,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 프레다 미리클리스 전문직여성세계연맹 회장 등 49개국 3,672명 참석
제7회 포럼 2012.5.31~ 6.2	주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참가자	김황식 국무총리,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폴 키팅 전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한승수 전 총리 등 36개국 3100명 참석
제6회 포럼 2011.5.27~ 5.29	주제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참가자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자오지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의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880명 참석
제5회 포럼 2009.8.11~ 8.13	주제	“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참가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한승수 국무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석
제4회 포럼 2007.6.21~ 6.23	주제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유럽 경험의 탐색”
	참가자	노무현 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전 일본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
제3회 포럼 2005.6.9~ 6.11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
	참가자	이해찬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제2회 포럼 2003.10.30~ 11.1	주제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
	참가자	노무현 대통령,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세미포럼 2002.4.12~ 4.13	주제	“21세기 세계평화의 재검토와 평화의 확산”
	참가자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임동원 청와대 특보,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장관, 국내외 정계학계 언론계 전문가 등 60여명 참석
제1회 포럼 2001.6.15~ 6.17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참가자	김대중 대통령,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나. 제주포럼의 과제

- 앞의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2001년 제1회 포럼에는 9개국 300여 명이 참가한 데에 비해 2013년 제8회 포럼에는 49개국 3,600여 명이 참가한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제주포럼이 장족의 발전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음. 제주포럼이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과 같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포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음.
- 제주포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한 사이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하자 한반도 평화정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토론과 대화의 장으로 2001년에 창설됨. 제주포럼은 이처럼 초기에 ‘평화’를 화두로 던지고 격년제로 운영돼 오다, 10년 만인 2011년에 ‘평화’ 외에 ‘변영’을 또 하나의 모토로 내걸고 연례 개최라는 탈바꿈을 단행함. 이러한 탈바꿈의 바탕에는 ‘평화’라는 주제만을 가지고는 포럼에 대한 참여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아 포럼의 장기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었음. 연례화 단행은 격년 개최로 인해 포럼의 단절이 반복됨으로써 연속성과 이슈 장악 등에 적잖은 문제점이 노정됐기 때문임. ‘평화와 변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탈바꿈한 지 3년째가 되는 오늘날, 일각에서 제주포럼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임. 이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포럼인 제주포럼으로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 등에서 특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음.
- 제주포럼은 제주의 MICE산업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창설 초기부터 재정적 지원을 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음. 다만 제주도민의 동참과 성원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다보스포럼이 시행하고 있는 ‘오픈포럼’ 형태의 세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포럼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종합포럼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의 관례화가 절실함. 이와 함께 제주포럼 기간에 맞춰 정부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제주를 방문한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제주포럼에 참석해 세계의 이목을 끌도록 하는 전략적 포석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포럼인 제주포럼으로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 등에서 특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음

막강한 네트워크

파워를 지닌

다보스포럼을 해마다

개최하는 호스트

국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스위스가 얻게 되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임

4. 제주포럼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가. 다보스·보아오 포럼의 소프트파워적 함의

- 다보스포럼은 민간조직이면서도 세계의 평화와 공익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다보스포럼이 표방하는 모토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헌신한다(Committed to improving the state of the world)’는 것임. 그동안 다보스포럼은 갈등 속에서 평화를 일궈내기 위한 소프트파워 전략적 행보로도 큰 명성을 얻음.
 - 1988년 그리스와 터키가 에게 해를 사이에 두고 전쟁으로 치닫자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투르구트 오잘 터키 총리를 초청, 다보스포럼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의 기틀을 마련한 ‘다보스 선언’은 유명함. 1989년 다보스에서 열린 남북한 최초의 장관급 회담, 독일 통일을 논의한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 헬무트 콜 서독 총리간의 다보스 회담, 1992년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마무리하기 위한 남아공의 데클레르크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의 다보스 회합, 1994년 아라파트 PLO 의장과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다보스포럼에서 평화협상의 물꼬를 튼 일 등도 그 사례임.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하자 그 이듬해인 2002년의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가 아니라 뉴욕으로 장소를 옮겨 열린 적도 있음.
-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다보스 주(Davos Week)’라 부르며 집결해 열띤 취재 경쟁 속에 다보스포럼이 열리게 되면, 스위스는 최고위 인사들이 일시에 몰리는 데에 따른 경비와 보안 등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함. 스위스로서는 ‘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포럼 개최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 한껏 투사하게 됨. 막강한 네트워크 파워를 지닌 다보스포럼을 해마다 개최하는 호스트 국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스위스가 얻게 되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임. 스위스는 다보스포럼에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포럼외교’의 무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전’까지 누리게 됨.
- 1970년대에 중국의 개혁방향을 민간기구 중 최초로 의제화하는 등 다보스포럼은 세계적인 ‘어젠다 세팅 플랫폼(agenda setting platform)’으로 자리 잡음. 이러한 다보스포럼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 초청받아 참석한 것은 2010년 1월 제40차 다보스포럼에서의 일임.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20 정상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이명박 대통령

이 참석해 특별연설을 함. G20의 운영 방향과 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다보스포럼의 당해 연도 주제(‘더 나은 세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건설하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의제였음. ‘어젠다 세팅 파워’가 큰 다보스포럼에서 던져진 화두가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 분야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국가 브랜드의 제고로 이어지게 됨. 다보스포럼 자체가 소프트파워의 경연장이라 할 수 있음.

- 보아오포럼은 형식적으로는 비정부 조직인 보아오포럼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여론 형성의 장임.
-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 2013년 제12차 보아오포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퍼스트레이디인 평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참석함으로써 이 포럼을 국가 최고의 행사로 격을 높임. 중국은 외국의 정상들을 비롯해, 각 분야 요인들을 대거 ‘안방’에 불러들여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음. 1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다자외교의 장이 열렸고, 시진핑 주석은 참가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화려한 ‘포럼외교’를 펼쳤음. 이와 관련 취싱(曲星)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장이 “보아오포럼의 규모가 커지고 격이 높아진 것은 각국이 중국의 새 지도자와 접촉할 기회를 얻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한 것은 시사적임(연합뉴스, 2013년 4월 6일 자).
- 중국이 보아오포럼을 권위주의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발전전략을 뜻하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나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의 ‘화평발전(和平發展)’론, 유구한 중화문명 등 소프트파워의 확산을 위한 발판이자,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춘 국가 이미지를 심는 호기로 심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은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님.

나. 국가적 차원의 제주포럼 육성

- 한국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 이외에도, 프랑스의 ‘세계정책회의(World Policy Conference)’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등 다양한 국제포럼들도 자국 정부의 뒷받침 아래 세계적인 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우리 정부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포럼으로서 제주포럼의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함.
- ‘세계정책회의’는 프랑스의 국제관계연구소(IFRI)가 주관하는 심포지엄

**다양한 국제포럼들도
자국 정부의 뒷받침
아래 세계적인
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우리
정부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포럼으로서
제주포럼의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함**

국제사회의 공감과

호감을 사는

소프트파워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이 외교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전략적

수단이 됨

으로, 2008년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의 후원 아래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제1차 회의 이래 유럽의 도시들을 전전하며 개최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정책토론의 장임.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매년 6월 열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은 당면한 세계경제 이슈 등을 논의함.

- 2001년 창설된 제주포럼이 격년제로 개최돼 오다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연례 개최로 바뀐 주된 배경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에 따른 것임. 제주포럼은 연례화 이후 참가 대상과 어젠다의 폭을 크게 확대하는 등 국제종합포럼으로서의 새 면모를 갖춰가고 있음.
- 이러한 제주포럼의 현주소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제주포럼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정치, 기업, 문화 및 학계 대표의 토론 프로세스로 기능하고 있지만 그 위상이나 국제적 평판은 보아오포럼에 한참 못 미친다”(정상화, 2013)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게 현실임. 앞으로 한국의 국가적 특성을 살린 참신한 포럼 개념을 재정립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절한 전략과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우리가 보아오포럼에서 특히 본받아야 할 점은 중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육성 의지라는 지적이 있음. 국제사회의 공감과 호감을 사는 소프트파워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이 외교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전략적 수단이 됨.

다.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 관례화

-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22일 제44차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특별 개막 연설을 함. 다보스의 콩그레스센터에서 슈밥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창조경제를 국제사회에 소개했고, 질의응답시간에는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은 물론 동북아 주변국들에게도 ‘대박’이 될 것임을 역설함. 이러한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참석자들에게 동시통역으로 전달됐으며 웹으로도 생방송 됨.
-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시리아 국제평화회담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것과 때를 맞춰 참석했으며, 이란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맞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의 하산 로우하니 대통령도 참가함.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등도 자리를

함께함. 박 대통령의 연설회장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연합뉴스, 2014년 1월 22일 자).

- 박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의 꽃’으로 불리는 플리너리 세션에서 한국의 창조경제를 세계의 긍정적 재편 문제와 연계해 널리 알린 것 자체가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동시에, 해발 1,500m 고지에 위치해 날씨도 춥고 교통과 숙소마저 불편한 산골마을에 4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을 포함, 100여 개국의 파워 엘리트 2,500여 명을 한자리에 모은 것 자체가 다보스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입증함. 중국의 국가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개막 연설을 함으로써 포럼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듯이, 현재 국내의 국제포럼들 중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제주포럼에도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관례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제주포럼을 브랜드 네이밍을 갖춘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하는 전략적 포석이 될 뿐만 아니라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함.

라. 포럼외교의 활성화

-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 등에 정상들을 포함, 현직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이러한 포럼들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공공외교의 진일보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임. 예전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마련된 다자외교의 장을 통해 이슈들이 논의됐다면 이제는 국제포럼이 그런 기능을 상당부분 대체해 가는 경향을 보임. 이는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에 한계를 보여온 점도 작용한 것임. 포럼은 기업이나 NGO처럼 국제적 공론장에서 소외됐던 대상에게도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가 하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이들도 다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아고라’와 같은 열린 공간을 제공함. 이처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간 논의보다 훨씬 다채로운 이슈를 수준을 달리하며 다룰 수 있는 점이야말로 포럼이 지닌 큰 장점임(문정인·이재영, 2014).
- 이러한 국제포럼에서는 공식 세션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행사가 마련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은 물론 네트워킹의 기회로 활용됨. 다보스포럼의 경우 공식 세션은 250개가량인 반면, 비공개의 경제지도자 회합을 뜻하는 IGWEL(Informal Gathering of World Economic Leaders) 등 비공식 행사는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국내의
국제포럼들 중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제주포럼에도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관례화할 필요가 있음**

**제주포럼의 경우 현직
정부 측 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트랙1.5' 형식을
가미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린 '한국의 밤(Korea Night)'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세계 경제계 핵심인사들을 상대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서는 등 '막후의 포럼외교'도 갈수록 증시되고 있음.

-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다보스포럼과 같은 공공외교의 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국이 직접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임을 감안, 한국도 이러한 포럼외교를 주도하는 차원에서 제주포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이를테면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제주포럼과 보아오포럼에 교차 참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지원이 요청됨.

마. 트랙1.5 형식의 가미

- 제주포럼은 본질적으로 '트랙2(track two)'의 민간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시사점이 풍부한 논의 결과라도 정책에 직접 반영되기 어렵지 않음. '트랙2' 포럼은 왕왕 긴장감이 떨어지는 담론의 장으로 그치게 되는 한계를 지님. 또한 '트랙2' 포럼의 참여인사들이 대체로 전직 중심이어서 정책 현장에 대한 거리감이 있게 되면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어려워짐. 현직 정상을 포함해 고위 인사 등의 참석이 많을수록 그 포럼의 영향력은 자연 커지기 마련임. 제주포럼의 경우 현직 정부 측 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트랙1.5' 형식을 가미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교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의 공동주최로 2002년부터 매년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약칭 '제주 군축회의')'는 전형적인 '트랙1.5' 형식의 국제회의임.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연례 군축비확산회의인 이 '제주 군축회의'에는 유엔 관리 및 10여 개국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함. 이 회의에서는 당해 연도 군축비확산 분야의 핵심 현안 4~5개를 선정해 평가하고 토론함. 2013년 11월 14일~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에는 신동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안젤라 케인 유엔 군축고위대표, 카를로 트레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TR) 의장, 모하메드 룰리키 유엔 대테러위원회(CTC) 의장, 그리고 한국·미국·중국·일본 등의 군축비확산 전문가 45명이 참석함. 이러한 '제주 군축회의'와 같은 트랙1.5 형식의 세션을 제주포럼에 다양하게 가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함.
- 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큰 축을 이루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제주포럼을 활용할 수 있음. 초기에 참가국들이 재난 구호·원자력 안전·기후 변화 등 연성의제와 관련한 협력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선하는 트랙1.5 형식의 회의는 정치적 색채가 얇은 휴양지인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만함. 이는 동북아 국가들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데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음. 이러한 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될 경우 제주포럼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임.

참고문헌

- 김상배(2009),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김상배 엮음, 파주: 도서출판 한울, pp.15-56.
- 김태환(2014), “21세기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 『JPI PeaceNet』, 2014-03.
- 문정인·이재영(2014), 『다보스 이야기』, 서울: 미래엔.
-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2008),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세계정치>, 29(1), 기획특집, 서울: 논형.
- 연합뉴스, 2014년 1월 22일 자; 2013년 4월 6일 자.
- 외교부 보도자료, 2006년 4월 21일 자.
- 정상화(2013), “보아오포럼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정세와 정책』, 2013년 5월 호, pp.21-24.
- 조선일보, 2014년 3월 5일 자.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09), 「뉴스레터」(2009.4.27.).
- 현대경제연구원(2014), “다보스포럼이 세계를 이끈다!” 『현안과 과제』, 14-02호 (2014.1.13.).
- Nye, Joseph S.(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홍수원 역, 『소프트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http://www.aecforum.net/>

<http://www.boaoforum.org/>

<http://www.ghrforum.org/>

<http://www.seouldigitalforum.org/kr/>

<http://www.weforum.org/>

<http://www.wkforum.org/>

❖ 저자 약력**■ 진행남**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경희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음.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공공외교, 남북관계, 동아시아 다자협력(제주프로세스), 한류와 문화공동체 등임. 최근 연구로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방송매체의 영향”,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강화 방안” 등이 있음.

JPI정책포럼 현황

- 하인즈 가트너 · 서동주 · 허태회 『신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미러관계: 특징과 전망』 (No.2014-01/02)
- 배금찬 · 경제희 · 이정우 『한 · 중 · 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 (No. 2013-17/18/19)
- 신각수 · 김성한 · 서창록 · 조정현 · 신부남 『한국외교의 방향과 현안』 (No. 2013-13/14/15)
- 조양현 · 신정화 · 고봉준 『일본과 동북아 안보』 (No. 2013-9/16)
- 주철기 · 진행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No. 2013-11)
- 유현석 · 이성우 · 김성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 (No. 2013-10/12)
- 진행남 · 한인택 · 황일도 『북핵과 한반도 평화』 (No. 2013-06/07/08)
- 제성훈 『3기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결정요인, 평가, 전망』 (No. 2013-05)
-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No. 2013-04)
- 진행남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No. 2013-03)
- 서승원 『일본의 대외전략을 다시 묻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한중일 트라이앵글 속의 한국』 (No. 2013-02)
- 이성우 『사회과학 관련 싱크탱크의 역할: 무엇이 싱크탱크를 강하게 하는가?』 (No. 2013-01)

- 이승주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No. 2012-18)
- 박종철 『귀국자를 통해서 본 북한사회』 (No. 2012-17)
- 이규창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성과와 과제』 (No. 2012-16)
-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No. 2012-15)
- 흐람치힌 알렉산드르 아나톨리에비치 · 이성우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남북한관계』 (No. 2012-14)
- 장노순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 (No. 2012-13)
- 조성권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 연계』
(No. 2012-12)
- 윤태영 『한국 안보 위기관리체계 및 전략의 발전방향』 (No. 2012-11)
- 박영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현황과 다자간 해양협력방안』
(No. 2012-10)
- 김장현 『한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No. 2012-09)
- 홍승목 『UN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제안 12개조』 (No. 2012-08)
- 김진호 『중국 정치 구조와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지도자 그룹』
(No. 2012-07)
- 김상배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화: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No. 2012-06)
- 유호근 『식량안보와 한국: 과제와 전망』 (No. 2012-05)
-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No. 2012-04)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2014

May 28-30, 2014
Haevichi hotel & resort, Jeju

Designing New Asia

| Hosts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East Asia Foundation

 중앙일보

| Organizer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